

‘미국 관세 소급 인하’ 소식에 자동차주 동반 강세

현대차·기아 4%대 상승 마감

관세 부담 덜고 내년 ‘파란불’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소식에 2일 현대차·기아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자동차주가 관세 부담을 덜고 내년에는 보다 활짝 가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4.52% 오른 26만6000원, 기아는 4.19% 상승한 1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동차주의 강세는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



코스피가 전장보다 74.56p(1.90%) 오른 3,994.93으로 마감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68.4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6.04p(0.65%) 오른 928.42로 마감했다.

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

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

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

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

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

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한동안 대미 관세에 발목이 잡혔던 자동차주가 불확실성을 털어버린 만큼 올해 4분기와 내년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품목 관세 영향에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작년 보다 13.7% 증가한 164억1000만달러(약 24조 원)를 기록했다.

1~11월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연간 최대 실적(708억6000만달러)까지 48억3000만달러만 남겨두고 있어 올해 사상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다들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대미 수출이 11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며 “완성차의 글로벌 도매판 매는 작년 대비 상승 흐름은 제약이 있었으나 대미 수출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오면서 핵

심 차종의 수출이 확대된 점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4분기 글로벌 도매판매는 현대차 108만대, 기아 89만대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아의 경우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ED-II 도입이 내년부터 시작돼 텔루라이드 플랫폼인지 시점인 내년 1분기부터 볼륨(규모)의 큰 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삼성증권 임은영 팀장은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영향이 남아 있는 4분기에 기타 비용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6년에는 신차 출시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자동차주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반등, 전장 대비 74.56p(1.90%) 오른 3994.93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72p(0.48%) 오른 3939.09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 장중 고가에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중국 직원 퇴사자는 개발자…팀으로 일해”

박대준 쿠팡 대표,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출석

과징금 1조원대 가능성에 “책임 회피 않겠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대규모 정보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퇴직 직원의 근무 역할과 이력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표는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다”면서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갖고 팀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규모에 대해서는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대표는 ‘유출과 노출 가운데 어느 게 맞느냐’는 질의에는 “유출이 맞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로 과징금이 1조 2000억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더불어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지적에 “저희의 책

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SK텔레콤은 역대 최고액인 134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대표는 휴면·탈퇴 회원의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과 관련, “일부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휴면이나 탈퇴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드렸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의 결제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나, 배송 주소록에 기재한 경우 공동 현관 비밀번호는 유출됐다는 것이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퇴직 직원의 범행 방법에 대해 “공격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휴면 서명키를 사용해서 다른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했다”며 “쿠팡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서명키를 취득한 후 이 키를 인증해 가짜 토큰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컨대 호텔에 객실 키를 발급하는 비밀번호를 내부 개발자가 탈취해 계속해서 객실 키를 발급하고 고객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미다. 매티스 CISO는 또 퇴직 직원이 해고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에는 “동기를 마음대로 추정할 수 없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다.

연합뉴스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빨라진다

국토부, 개정안 공포 시행…기본조사 착수 앞당겨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 시에야 비로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 사항을 내년 1

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조사와 협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전체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조기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치킨 중량표시 도입…‘슈링크플레이션’ 견제

정부 대책발표…BHC·BBQ 등 10대 브랜드 의무적용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썬스 인상(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용량 표시 중량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g 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러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바 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 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가 ‘몸보신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연합뉴스

쿠팡 수수료 등 매출 21% 차지 거래 중기서 떼가는 비용 과다

쿠팡이 거래하는 중소기업들로부터 받는 비용이 다른 플랫폼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을 주거래 쇼핑몰로 둔 중소기업 162개사가 수수료 등으로 쿠팡에 지급하는 비용이 쿠팡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평균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690개사가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에 지급하는 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18.8%) 보다 1.8%포인트나 높았다. 이 비중은 무신사를 주거래 쇼핑몰로 거래하는 중소기업(23.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도 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쿠팡에서 벌어서 떼주는 비용이 많다는 뜻이다.

쿠팡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이 된다고 꼽은 비용 항목은 판매수수료(50.0%), 물류비(29.0%), 광고비(19.8%) 순이다.

또 쿠팡에서 물건을 팔거나 거래가 확정된 후 정산 대금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다른 쇼핑몰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일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34.0%나 됐다. 다른 쇼핑몰은 51일 이상 걸린다는 응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쿠팡의 중개 거래 판매 수수료율은 14.21%로, 전체 평균(13.82%)보다 높았다. 그렇다고 쿠팡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늘어난지를 물어봤을 때 평균이 3.64점으로 주요 쇼핑몰 6개사 중에서 4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전남도와 나주시는 2일 나주 일반산업단지에서 푸드테크 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전남도-나주시, 푸드 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 첫 삽

나주 일반산단에 105억원 투입…장비·공간 등 인프라 구축

전남도와 나주시는 2일 나주 일반산업단지에서 푸드테크 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 기공식을 열고, 미래 식품산업에 선도할 핵심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섰다.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은 농·축산·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식품 소재와 기능성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이다.

맥주 제조 후 남은 맥주박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세계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은 연평균 4.6%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며, 2032년에는 약 11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국내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로, 배·쌀·곡물·채소 등 부산물이 풍부해 업사이클링 원료 공급에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역적 강점이 인정돼 전남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착공한 연구지원센터에는 총 105억 원이 투입되며, 건조·분쇄·냉동·포장 등 부산물 소재화를 위한 장비와 시설 제품 개발 공간, 연구·분석실 등 기업이 공동 활용할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농식품 부산물을 분발·추출물·기능성 원료로 가공하고, 기업은 센터 장비를 활

용해 시제품을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2029년까지 고용 280명, 사업화 매출 165억 원, 부가가치 260억 원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남 식품산업은 기존의 ‘가공·완제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소재·시제품·완제품을 지역에서 모두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의 풍부한 농수산물 자원과 업사이클링 잠재력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자산”이라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지역 식품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